

No. 2013-01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01.02

2012년 일본경제 10대 뉴스

1. 31년 만에 무역적자로 반전
2. 아베 신정권 등장
3. 일·중 관계 악화와 경제마찰
4. 대규모 기업통합·합병·매수
5. 원전 재가동 결정
6. 소비세 증세법안 통과
7. 일본반도체 엘피다 파산
8. 가전산업의 추락과 재편
9. 한·일 긴장관계와 통화스와프 중단
10.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

2012년 일본경제 10대 뉴스

- 일본경제는 2012년에도 엔고 하에서 지진피해의 복구·부흥 노력이 지속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음
 - 일본경제신문사의 자회사인 「일본경제 BP」와 「경제뉴스 제미」가 뽑은 2012년 10대 경제뉴스를 중심으로 회고해보고자 함
- 2011년이 일본경제가 대지진 등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의 해였다면, 2012년은 재앙의 극복과 일본경제의 재생 노력이 강조되었던 해였음
 - 그러나 유럽재정위기 일·중 관계 등의 영향에 따른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일본식 비즈니스모델의 한계노정 등 일본경제의 세계적 위상 하락이 민주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짐
- 12월 26일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 강국과 일본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됨
 - 일본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과 경제재생,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 재정위기와 재정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미국과의 공조체제 강화, 악화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 복원, 그리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FTA 정책의 진전 등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함

1. 31년 만에 무역적자로 반전

- 무역흑자대국인 일본이 무역적자국으로 전락, 1980년 석유파동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31년 만에 2011년 무역수지가 2조 4,927억엔 적자를 기록
- 이는 사상 초유의 엔고와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로 수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데 비하여, 수입은 LNG수입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12%나 증가했기 때문임
- 무역적자는 2012년에도 지속되어 향후 구조적으로 정착, 수년간 무역적자 탈피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의 이자나 배당으로 적자를 보전하지 않으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채 소화 등 국가의 재정운영도 해외에 의존해야만 하는 등 일본경제가 기로를 맞음

2. 아베 신정권 등장

-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 아베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을 넘는 294석을 확보
- 12월 26일 출범한 아베 정부는 디플레 탈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이른바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학)에 입각한 일본경제 재생을 추진
 - 일본은행과 정책협정을 맺어 소비자물가상승율 2% 목표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금융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 활력을 진작하기 위한 성장전략에 맞추어 3%이상의 명목성장을 달성을 목표로 제시
- 경제정책사령탑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 부활’과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신설, 각각 성장전략·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경쟁력강화에 주안점을 둔 산업정책을 주도토록 함
-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공약은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이 같은 ‘정치 우경화’가 초래할 한일 관계 악화와 동북아 평화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등과 같은 공약들은 동북아 정세에 격랑을 일으킬 사안들임
- 경제정책면에서는 선거공약대로 일본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는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엔화공급 증대에 따른 엔저 행진이 가일층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엔화 약세로 일본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되면, 한국기업은 일본산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 등과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가능성이 있음

3. 일·중 관계 악화와 경제마찰

- 센카쿠도(중국명 다오이다오) 영토 분쟁을 도화선으로 일·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이에 따른 악영향이 양국의 경제에 파급
- 일·중간 무역, 무역외거래, 투자, 경제협력 등 거의 모든 경제관계가 축소되고 마찰이 발생
 - 중국 소비자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중국내 일본기업들의 공장가동 중단 및 수익 감소, 일본기업들의 대중 수출 감소,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감소로 인한 일본내 소매업의 타격, 일·중 경제교류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음

- 중국내 반일 데모 등 중국리스크가 증대. 그렇지 않아도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일본기업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제 3국으로 투자처를 이전하는 이른바 「차이나+1」 투자전략이 가속화
- 일·중간 경제마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은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경기가 위축, 하반기에 기대했던 수출의존형 성장이 어렵게 됨

4. 대규모 기업통합·합병·매수

- 2012년 10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이 합병하여 신일철주금을 출범. 조강 생산량 세계 2위인 신일철은 신흥국들의 철강수요 증가나 엔高 등에 대응한다는 전략
- 2012년 11월에는 중전기분야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전력시스템사업을 통합. 2014년 1월 신규법인을 설립키로 함(미쓰비시중공업이 65%, 히타치가 35% 출자)
- 이는 글로벌경쟁에 대한 위기감으로 해외경쟁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중전업계의 재편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기타 히타치제작소의 자회사인 히타치금속과 히타치전선의 합병(2013년 4월 1일), 소프트뱅크사의 미국 스프린트 매수(2012년 10월), 파나소닉전공과 산요의 합병(2012년 1월)등이 발표
- 최근 일본의 대형 합병은 엔고, 신흥국들의 추격, 글로벌경쟁의 격화 등으로 악화된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규모의 경제효과와 범위의 경제효과 외에도 모든 경영자원의 통합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앞으로도 사업재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5. 원전재가동 결정

- 금년 6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가동을 정지한 원자로 50기 가운데 2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
- 일본은 2012년 5월 5일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42년 만에 원전 제로 상황으로 여름철 전력난이 우려되었음
- 민주당 정부는 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건설계획을 백지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아베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고 핵연료리사이클(재처리)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밝힘
- 원전 반대 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원전 폐지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6. 소비세 증세법안 통과

- 소비세 증세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 관련 법안’ 이 8월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 소비세 증세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세대의 연금 및 의료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 증세가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 안정을 양립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민당도 중의원해산을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협조
- 현행 5%인 소비세율은 2014년 4월부터 8%로, 2015년 10월부터 10%로 2단계에 걸쳐 각각 인상될 예정
- 일본정부는 사회보장지출이 연간 1조엔 정도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증수 되는 전액을 연금이나 의료 등에 충당,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소비세 증세법안은 경제 환경이 급변할 경우, 증세를 보류하는 조항이 있는데 2011~2020년 평균 명목 3%정도(물가변동분 제외), 실질 2%정도의 GDP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기조항은 경제상황에 따라 8% 인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임

7. 일본반도체 엘피다 파산

- 2012년 2월, 일본의 최대 반도체메이커인 엘피다가 국가에 280억엔의 손실을 끼친 채 법정관리에 들어감
- 200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 제 1호로 지정, 그동안 300억엔의 공적자금 투입과 100억엔의 정부보증융자를 실시
- 국가가 민간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출자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효과, 손실발생시 책임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며 일본 반도체산업의 추락 신호탄이 됨
- 일본정부는 계속지원을 전제로 엘피다에 근본적인 경영재건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엘피다는 작년말부터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대만기업등과 자본·업무 제휴

교섭을 추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결국, 히타치제작소 등 일본의 3대 전자메이커들이 포기한 DRAM사업을 인수하여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엘피다가 설립 10년 만에 미국 마이크론사에 매각됨
- 엘피타 파산은 정부도 결과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본 반도체산업의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8. 가전산업의 추락과 재편

- 일본 제조업의 상징적 존재였던 가전업체들이 대규모 적자로 전략
 - 파나소닉은 2012년도 적자가 7,650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 이는 휴대전화와 전지 등의 사업축소에 따른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임
 - 샤프는 2012년도 연결최종손익이 4,500엔의 적자를 낼 전망이라고 발표. 액정패널 등의 재고평가손실로 2기 연속 과거 최대 규모의 적자를 갱신. 소니도 최종손익이 401억엔의 적자를 기록
-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샤프와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피치는 샤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BBB-에서 6단계 낮춰 투기적 등급인 B-로 발표
 - S&P는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2단계 하향
- 위기 극복을 위해 차세대 TV인 유기ELTV사업 분야에서 라이벌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제휴교섭에 들어간 한편, 도시바는 TV생산을 중단
 - 소니와 파나소닉은 유기ELTV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대형 패널의 생산시기를 단축하는 데 협력, 금년 중 유기ELTV 발매 예정인 삼성에 대항하려는 것
 - 도시바도 후카야시공장의 액정 TV생산을 완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
- 도시바보다 먼저 발표한 히타치의 TV국내생산 종료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TV산업은 대폭 재편·축소되는 것임
- 이와 함께 주요 부품의 개발에서 조립에 이르기까지 자사에서 완결시키는 이른바 일본식 자전주의 노선에서 탈피하는 비즈니스모델의 개혁필요성이 제기
- 그러나 최근 일본가전업체들이 사활을 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불리 몰락을 언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함

- 반도체 및 핵심기술이 필요한 부품분야의 기술력과 제조능력은 일본 업체가 세계최고 수준이며, 일본전자업체는 외부에 완성품제조를 위탁하더라도 핵심 부품 공급만은 자사가 보유하면서 산업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9. 한일 긴장관계와 통화스와프 중단

- 2012년 8월, 독도문제, 역사문제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띤 긴장관계가 조성
 - 한·일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했던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고 경제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 일본 측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 한국 국채의 구입 보류, 對韓투자나 무역 등에 대한 마인드 변화 조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중단만 현실화됨
 - 10월말로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협정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 시장 혼란 시 한일 간 통화교환 한도가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축소
 - 이를 놓고 한일 양국이 겉으로는 부정했으나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경제협력관계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통화 스와프 확대 중단은 한국, 일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 긴장국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 영향이 경제관계에 과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내는 지혜와 노력이 한·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됨

10.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

- 금년에도 유럽재정위기 지속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일본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기대했던 수출주도의 경제회복이 되지 않았음
- 유럽지역의 직접적인 수출부진은 물론, 중국 등 대유럽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부진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 대한 연쇄적인 수출부진이 지속
- 이에 가세하여 유럽재정위기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된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가 엔고를 부추기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수출에 악영향을 미침